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 혜 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과장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 혜 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과장

## 01

## 들어가며

지난 6월 8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특별한 사료 기증식이 있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특별한 사료를 기증한 것이다. 이 사료는 신군부 시절 대표적인 언론 통제의 도구인 ‘보도지침’ 사료였다.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의 세부 일일지침으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전화로 지령한 메모 형식의 자료 584건이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을 증거하는 자료는 누군가 몰래 빼내오지 않으면, 공공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 정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기고 폐기하기 때문이다. 보도지침은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주언 기자가 구속을 감수하고 편집국에서 빼내왔고, 대안매체였던 〈월간 말〉을 통해 공개하면서 신군부의 언론통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보도지침 사료는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던 엄혹했던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다.

전근대 기록관리가 주로 권력자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 문서 확보가 중심이었다면, 현대 기록관리는 단체나 개인을 중심으로 시민 기록 수집, 공동체 아카이브, 종교 단체 아카이브, 공동체 기록 등 민간의 다양한 기록화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권력자의 억압의 기록도 포함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바로 이러한 권력자의 억압은 물론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아카이빙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분야 아카이빙은 1999년 ‘민주주의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주화운동자료관 건립 준비모임’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허상수·한국사회연구소 연구 위원 등)이 관련 단체들과 자료교류협정을 맺고 기록관리 전문가, 성공회대 연구교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료 수집, 정리 활동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2000년 ‘민주화운동자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민자추)’가 결성되었고, 민자추와 성공회대학교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자료관’을 개관하고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여러 활동가·연구자들의 자료 기증에 힘입어 6만여 건의 기록·자료를 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2003년 민자추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으로 이관하였다.<sup>1)</sup>

1)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소개마당 연혁, <http://demos-archives.or.kr/history>

---

민주화운동 분야 아카이브는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부산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등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위의 민자추의 자료를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기증한 민주화운동 기록을 가장 방대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초창기부터 아키비스트들과 협업해서 사료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설립 20년차를 맞았지만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해 왔고 그 가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대외적으로 소개한 적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의 현황과 소장 사료들의 공적 가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사료콘텐츠, 오픈아카이브 운영 등을 맡아 추진해 오고 있다.

## 02

##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사료관은 제 6조 2항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디지털화,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이래로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관, 단체 등 827곳으로부터 약 85만건의 민주화운동 기록을 수집<sup>2)</sup>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다.

사업회 설립 초기에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민주화운동 기록의 유실, 훼손을 막고자 최대한 많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사료수집팀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사료수집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앞서 살핀 민자추의 자료를 비롯하여 YMCA,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영규, 박용길, 박형규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인물 중심으로 대량으로 기록을 수집했다.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주로 성명서, 편지, 메모, 교육자료, 회의록 등의 문서기록이 약 88%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1950년~200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현대사 사진기록이 10%를 차지하고, 일부 음성영상류, 박물관이 있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위의 기록 외에도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라는 타이틀로 기록에 담기지 않은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술기록도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구술 수집은 어떤 시대나 사건을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기억을 구술 채록을 통해서 문서, 사진, 영상으로도 담지 못하는 경험자들의 기억을 재현해낸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현재 사료관은 ‘4·19혁명’, ‘한일협정반대운동’, ‘삼선개헌반대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은 민주화운동 사건과 노동, 농민, 여성, 인권 등 부문 운동을 주제로 약 813명의 구술자로부터 2,270시간의 증언을 수집하였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리시스템 등록 기준(2020년 6월 3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존 서고(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렇게 수집한 기록들은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기, 항균제 등의 전문 설비를 갖춘 보존서고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정리와 평가를 마친 후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연간 100만 명<sup>3)</sup>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자들,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하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리고 문화콘텐츠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700만 명 국민의 심금을 울린 영화 <1987>의 역사적 사실의 많은 부분 역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존서고의 사료를 통해 고증되었다. 당시 영화 <1987> 연출팀은 사료관에 방문해서 김정남 구술녹취록, 6·10민주항쟁 당시 영상,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고문 경찰관 법정 자료 등을 열람했다.

3) 와이즈로그(Wise Log)를 분석결과 2019년 오픈아카이브 방문자 수는 1,161,658명이며, 중복 IP수를 제거한 순방문자 수는 745,898명이다.

## 03

## 공공기록과 다른 민주화운동 사료의 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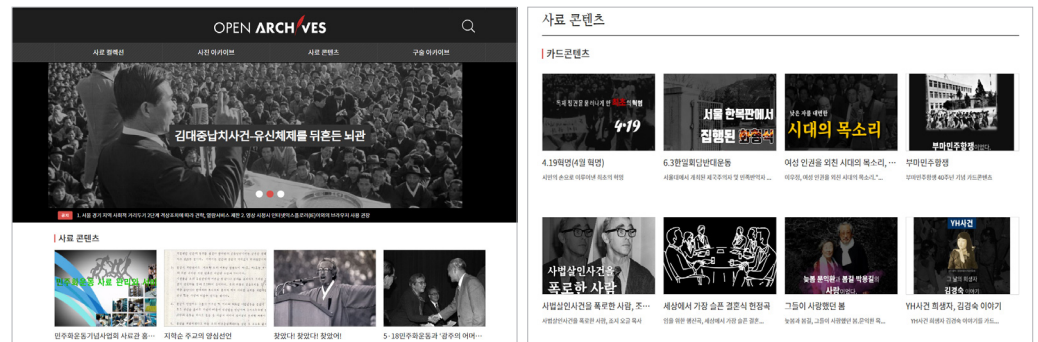
기록은 생산 주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는 공공기록과 개인, 시민사회 단체 등이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는 민간기록으로 나뉜다. 공공기록은 일관성 있고 정돈된 문서형식으로 생산되고 모기관으로부터 이관받는 기록이며, 시기별 관리체계에 의해 현황 통보, 이관, 폐기의 절차를 가지지만 민간기록은 형식이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되며 명시적 프로세스가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sup>4)</sup> 이 글은 기록의 관리 주체, 수집, 보존,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여 한꺼번에 이관되는 공공기록과 대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보관한 기록물을 민간기록으로 지칭하였다.

국내 기록관리 영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공문서의 작성 절차 및 문서 처리 규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최소한의 조항만 존재했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기록관리체계가 형성되고 서서히 공공분야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통해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록관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등 민간기록 수집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로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민간단체나 기관, 개인이 소장한 중요 기록물을 수집, 정보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며 발전해 온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역사이다. 따라서 정부 기록, 대통령 기록 등 당시 지배층이 생산한 공공기록만으로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서술이라고 해도 기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독재시대의 공공기록의 경우 지배층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록만 남기고 나머지 불리한 기록은 축소 또는 은폐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은 주로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탄압을 증거하는 기록만이 존재한다. 서두에서 살핀 보도지침 사료 또한 신군부가 언론 통제를 통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공공 영역에서는 기록이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의 큰

4) 프레드릭 M. 2002. 조경구·한국국가기록연구원 공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25-27쪽.

죽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과 사건, 과정 그 모습을 담은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역사의 개념적 균형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 영역인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생산한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과 공적 가치가 드러난다.



오픈아카이브 메인 화면(좌), 사료 콘텐츠 화면(우)



## 04

## 더 나은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를 위한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여년간 다량의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예산, 인력 부족, 그밖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오픈아카이브에서 ‘보이지 않는 자료를 오픈하는’ 문제, 구술 사료 서비스 확대’의 문제, 더 나아가 기록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편 이렇게 세 가지이다.

### 1) 오픈아카이브를 ‘오픈’하는 방안

오픈아카이브는 사료관이 수집한 사료를 모두 등록해서 공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그러나 오픈아카이브에 사료관에서 수집한 모든 사료가 공개되고 원문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기 수집한 약 85만건의 사료 중 오픈아카이브에는 약 60만건의 사료가 서비스되고 있고, 이 들 중 약 50%만이 원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은 사료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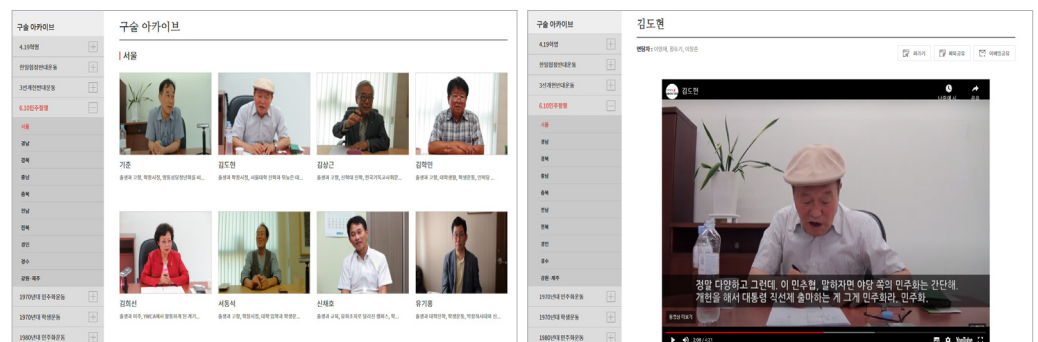
이처럼 오픈아카이브에서 보이지 않는 자료를 모두 오픈하기 위해 사료관은 수집한 민주화운동 사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등록하는 DB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사료DB사업은 2000년대 초반과 2008-2011년 국가DB구축사업이 한창일 때 시행되고 한동안 다른 사업에 밀려 주춤하다가 2019년부터 재개하였다. 작년에는 린다 존스(Jones, Linda Huffman)가 기증한 해외에서 생산된 민주화운동 사료를 비롯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보도실장 박용수, 로이터통신 외신기자 정태원이 촬영한 사진필름류 등의 등록사업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 사료 수집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대량 사료들이 이관되므로 사진필름류나, 정간물 등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수집 사료 중에 저작권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대표적인 예로 <월간 말>이 있다. 말지는 독재 정치에 대한 대안 매체가 전무하던 1986년 9월 군사정권의 보도지침 폭로,

1987년 12월 ‘폭력과 조작의 진상-부정선거’ 등 정치권의 부패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고, 제도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한 민중의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사료관은 2010년 인천의 창고에서 <월간 말>의 사진필름류, 문서류 등을 대거 수집했다. 하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산한 기관(단체)가 소장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결하지 못해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신문> 또한 유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법률 자문과 저작권료 지불 등을 통해 고가치 희소사료를 아카이브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 2) 구술기록 서비스의 어려움, 그리고 확대를 위한 방안

구술기록 수집은 경험자가 문서나 사진에 남기지 못한 기억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구술기록은 그 가치에 비해 즉각적인 열람 및 활용이 어렵다. 이미 2-30년 이상이 지난 구술자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의 흐름,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 관련 증언은 개인정보 노출 여부, 사실관계의 오류,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구술 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관은 구술기록에서 중요한 증언을 5-10분 내외로 발췌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오픈아카이브에 공개하고 전체 구술 수집본(녹취록) 열람 요청시 구술사업 담당자가 비공개 요소를 삭제 처리한 열람본을 만들어서 제공하지만, 구술기록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은 굳건하다.



오픈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 6·10민주항쟁 리스트(좌), 김도현 구술 하이라이트 영상(우)

현재까지 수집된 구술기록 중에 일부만이 열람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전체 구술 수집본(녹취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체 구술기록의 열람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 수집본을 연구, 감수하여 기록이 없어 주목받지 못했던 결락 자료, 또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모아서 시대별, 주제별로 구술 자료집을 출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5·18기념재단에서 2006년부터 출간한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 기억과

역사』(교육가편, 사회활동가편, 간호사편 등)와 같은 도서가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출판된 구술 자료집은 증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 3)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전환

오픈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도구를 기반으로 제목, 생산기간, 생산자, 기증자 등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검색 중심의 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풍부한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이용자들은 원하는 기록에 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민주화운동 사료해제를 통한 ‘사료컬렉션’과 ‘사진아카이브’를 제공하지만, 이조차도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사건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연구자가 아니면 기록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의 활용에 있다. 아카이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up>5)</sup> 민주화운동 사료의 대표 아카이브로서, 오픈아카이브는 연구자, 일반인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더 나아가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소장 기록에 대한 해제, 분석을 통한 상세한 기술정보 또는 조사·연구 가이드(Research Guide)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워싱턴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Records Administration), 영국 국립 보존 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등 국외 아카이브는 물론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국내 아카이브도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소장기록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또는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기록원의 카탈로그는 기록을 생산, 관리 맥락에 따라 분류, 조직화하고 계층적 관계를 설정하여 기술 정보를 작성한 것으로, 2019년부터 매년 카탈로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서울기록원 카탈로그에 반영하고 있다.<sup>6)</sup> 민주화운동 사료의 경우에도 기록의 연구, 조사, 분석을 통한 상세한 기술을 담은 카탈로그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에게 기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록간의 연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 역사와 기록을 입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픈아카이브에 탑재된 수많은 민주화운동 기록과 콘텐츠 중 유의미한 기록을 선별, 분류하여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합하여 인터랙티브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것도 시도해볼만하다. 경향신문은 데이터 시각화와 정보 그래픽을 중심으로 인터랙티브 뉴스를 편성해서 연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기획 ‘1748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산재 사망사고 아카이브)는 참고할

5) 김지현. 2015.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기록관리론』. 268쪽.

6) 서울기록원 카탈로그 이용방법,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research-guide/451>

---

만하다. 재해 발생 장소 분포, 시간대별 빈도 등 의미 있는 통계치를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사망원인, 노동자의 업종, 나이, 숙련도 등 분류를 보여주고 이용자가 직접 한 명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픈아카이브 역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사건이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주제별 컬렉션 또는 기증자 컬렉션 등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관적인 인터랙티브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도울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핀 기술 정보 또는 조사·연구 가이드와 인터랙티브 아카이브 구현은 그동안 축적된 민주화운동 연구 성과와 유의미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세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오픈아카이브에서 구현되고 있는 트랩스크립션과<sup>7)</sup> 오류신고 기능에서 더 나아가 사진 속 장소나 인물 태그 서비스 제공, 나만의 민주화운동 분류체계 만들기 등의 시민 참여 서비스 확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무한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시도해볼만 하다.

---

7) 글씨를 흘려쓰거나, 훼손되어 사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료를 지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서비스로,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기능이다. <https://transcription.si.edu/view/6601/EBLuX>

## 05

## 맺음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여년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된 모든 형태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를 운영해 왔다. 보존서고에 보존 중인 기록들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고난과 투쟁, 갈등과 두려움, 피와 땀, 눈물이 사료 하나하나에 녹아 들어있다.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기증으로 만들어진 보물창고다. 민주화운동 사료발굴, 수집, 보존, 서비스 과정 그 자체도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에서 20여년의 노고가 느껴진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층이 생산한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던 참여자가 생산한 민주화운동의 사료와 같은 민간 기록이 필요하다. 탄압의 증거와 투쟁의 기록이 함께 고증될 때만이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사료는 역사의 개념적 균형성을 위한 공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연구와 민주주의 문화 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오픈아카이브에 최대한 많은 사료를 공개하고, 둘째, 구술기록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셋째, 오픈아카이브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화운동 관련 유관기관과 기록과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장 기록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풍부한 민주화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균형 잡힌 연구를 하고, 꿈꾸며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은 ‘또 다른 <1987>’을 꿈꾸고 일반 시민들은 민주주의 투쟁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의 공적 가치가 확장되는 방향이 아닐까.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8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